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2 / e-mail: dkyoon@kwid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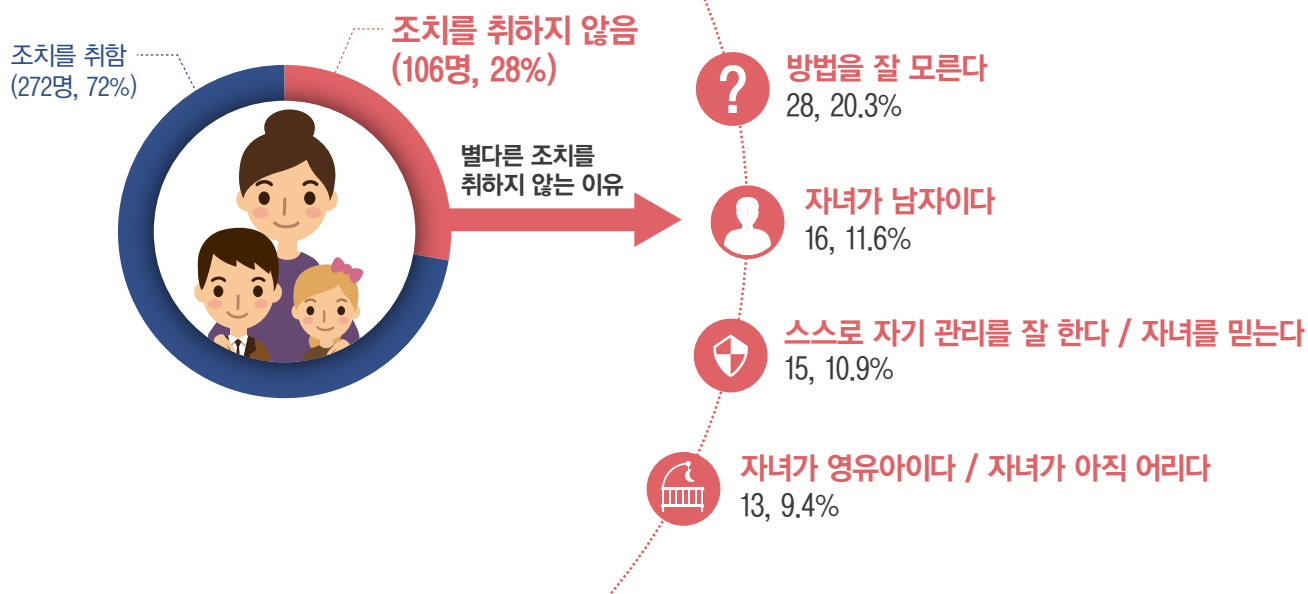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방안* -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를 중심으로 -

요약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소극적 조치 유무

(N=138, 중복응답 가능)



1. 배경 및 문제점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으로서의 성범죄자 사후관리제도의 하나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함
- 아동·청소년은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제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가능성을 차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제도들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20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근거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법 개정의 과제

- 공개고지 대상 신상정보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개별적 평가 없이 동일한 점에 대해서는 등록 및 공개기간,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제공되는 대상범위에 대한 등급제와 같은 구분이 필요할 것임
- 인터넷 공간상에서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또한 그만큼 성폭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개신상정보에 이메일주소, 소셜미디어 계정의 포함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우편고지 대상자를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 기관의 경우 취업제한대상기관으로 일률 지정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고지제도는 성폭력범죄자 거주 지역 일반 주민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지만, 해당 사건의 범죄피해자에게는 고지되지 않음.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 근거규정이 없음.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우편고지의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취업제한제도 법 개정의 과제

-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여부 다툼의 현실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하면 취업제한 대상기관마다 아동·청소년과의 일상적 접촉이 상시적이지 않다면 일정시간별, 직종별 제한의 구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취업제한의 기간 또한 선고형량, 범죄내용, 재범가능성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법관의 판단에 따른 개별적 설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미국의 사례처럼 무기한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고의무제도 법 개정의 과제

-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들이 접근이 어려운 친족 아동성폭력의 경우 신고의무대상자를 친족이나 이웃에게 확대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자는 주장도 있음
-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고의무의 확대가 친족성폭력의 실효적 대책이 될지 여부는 실증적 검토가 필요함. 다만 신고사례가 오인으로 판단될 경우 면책규정을 둘 필요성은 검토해 볼 만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운영현황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개방법은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람e)를 통해 공개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 알람e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법원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결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송부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함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의 운영현황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은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경찰서(형사과)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함. 성범죄 경력조회 시 본인이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이 2012.8.2부터 의무화 됨. 또한 기존에 지침으로 그 주기를 연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던 것을 2016.11.30.부터 연 1회로 법제화 함
-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람e)에 3개월 이상 공개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자 개개인에 대한 경력조회에서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까지 공개하는 구조를 갖추므로써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는 2006년(06.6.30)에 신설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10년(10.1.1)에 신설되었고, 2012년(12.8.2)에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회 변경됨(13.6.19).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함.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음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한 제도운영 현황

■ 관련 예산현황

- 신상공개제도 즉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와 우편고지의 예산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공개의 경우 2010년 1억 2백만 원에서 2013년 2억 8백만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1억 5천 3백만 원까지 감소, 2017년 1억 8천 1백만 원까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신상정보 우편고지는 2012년 5억 2백만 원에서 2015년 68억 2천 7백만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55억 5천 7백만 원까지로 감소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예산 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6천 8백만 원에서 2012년에 4천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1억 2백만 원으로 증가한 이래 2016년 1억 9천 6백만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1억 9천 1백만 원으로 약간 감소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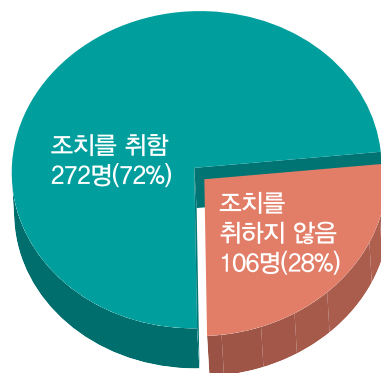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확대를 교육 목적으로 함.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대처능력을 높여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음. 청소년성보호법 제35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6조를 교육 근거로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5년간 실적을 보면, 2012년 7,000명, 2013년 8,441명, 2014년 9,855명, 2015년 13,436명, 2016년 15,550명으로 나타나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신고의무 교육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또는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종사자 및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교육임. 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취업제한대상기관이 1회씩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일반적인 강의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교재를 생산하여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 설문조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은 유형에 따라 기대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네 가지 제재정책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기대하는 예방효과를 중심으로 제재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정책적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임
- 나의 자녀와 이웃의 자녀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웃 자녀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 이는 자신의 자녀가 이웃의 자녀보다 성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나의 자녀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없는 20대의 미혼 여성 응답자가 미래의 자녀에 대한 성범죄 노출 위험성을 가장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0대 여성이 인식하는 미래 자녀에 대한 높은 성범죄 노출 위험성은 현재 우리 사회가 자녀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은 양육 환경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이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 기피와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기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조사 대상자 378명 중 272명(72%)이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6명(28%)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소극적 조치 유무

-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위험성(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 한다'는 응답이 41명(29.7%)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방법을 모른다' 28명(20.3%), '자녀가 남자이다' 16명(11.6%),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한다' 15명(10.9%),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13명(9.4%)의 순이었음. 그 밖에도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또는 위험한 장소나 늦은 시간에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음.
-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관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의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부모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예방 및 보호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순위	이유	N	%
1	위험성(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한다	41	29.7
2	방법을 잘 모른다	28	20.3
3	자녀가 남자이다	16	11.6
4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한다 / 자녀를 믿는다	15	10.9
5	자녀가 영유아이다 / 자녀가 아직 어리다	13	9.4
6	보호자와 항상 같이 있다	5	3.6
7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	5	3.6
8	학교·유치원과 집 이외에 가는 곳이 없다	3	2.2

9	늦은 시간에 활동하지 않는다	3	2.2
10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3	2.2
11	주변에 성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다	2	1.4
12	사람 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다	1	0.7
13	연락을 자주 한다	1	0.7
14	학교나 사회에서 잘 교육되고 있다	1	0.7
15	주변에 우범지역이 없다	1	0.7
계		138	100.0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해결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제도에서만 가족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회와 국가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신고의무제도가 가정이 아닌 외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가족이 미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 공동체의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회피행동도 네 가지 제재정책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 회피행동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할수록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심층면접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우편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우리 동네에 이런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우편고지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한 주민공개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신상공개제도가 가해자에 대한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 최근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되었고,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나 우편 고지도 이 기간을 따르게 되므로 신상공개를 막연하게 20년을 선고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제도, 전자발찌제도, 취업제한제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후 관리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신상공개제도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동 제도가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인지를 위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우는 비교적 인식이 잘 되어 있어서 취업예정자, 재직자, 단기간 근무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PC방이나 태권도장 등 사적 영역 대상자들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교육에서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의무조치에 관한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일이 중요함
- 신고의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매뉴얼의 작성이 요청됨
 - 그 내용으로는 상담자들이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매뉴얼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관련 외국사례

- ▶ 미국의 경우, 웨터링법(Wetterling Act)에 의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를 연방법 수준으로 법제화한 이후에도,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음
- ▶ 영국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혼란이 없도록 하고, 2012년 발행이후 해마다 버전을 달리하여 발행하고 2017년에는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행하기도 함
- ▶ 성범죄자에게 해외여행 시에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국가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인터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상등록 성범죄자의 해외여행 시 제한할 수도 있음
- ▶ 미국은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원 식별 정보(이메일, 웹상의 아이디 등)의 등록 규정을 통해서 신상등록 및 공개 개념을 온라인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3. 정책제언

📍 제안1) 관련 제도의 법적 개선과제

- ▶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 효과적이고 적절한 제도를 시행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및 아동성범죄 발생과 재범율, 성범죄피해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를 비롯한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평가연구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정책평가 정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못지않게 정부와 시민이 공유해야 할 중요한 정보이며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정책에서 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강화되고, 성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 ▶ 미국의 2015 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법안에 의한 군대 내 취업제한제도 도입
 - 군대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를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 군의 경우에 다수의 군인가족이 그 아동과 군대 내의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아동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병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를 통한 관리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함

📍 제안2)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의 모색
 - 우편고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편고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안내가 필요한데 안내방법의 하나로 주민공개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가해자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서 현장기관의 전문가들은 신상공개대상자들이 지역에서, 직장에서 배제되어 결국 갈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바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반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음

- 제도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시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두려움’ 고려한 연구 및 정책집행 필요

-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신상공개를 통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음
-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 등에 대한 제도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와 이를 고려한 법집행이 필요함
-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범죄유무만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신고의무 교육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또는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종사자 및 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교육이므로, 이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마련될 필요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확대운영을 위한 예산 확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확대운영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의 전격적인 확충이 요구될 필요가 있음
- 예산 확충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일반적인 강의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교재를 생산하여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기관의 성범죄 경력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공공기관의 경우는 비교적 인식이 잘 되어 있어서 취업예정자, 재직자, 단기간 근무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사적 영역의 시설들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아동·청소년 관련 사적 영역의 기관(시설)장들에게 지자체의 공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치 의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교육에 PC방, 태권도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의 장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경력조치 의무 및 그 필요성을 납득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신고의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매뉴얼 작성 필요

-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업무처리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 매뉴얼에는 성범죄 피해사실의 신고와 관련된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애매한 부분을 통일적으로 제시하고 신고 시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포함할 것이 요구됨

■ 기간제 보건교사에 대한 권한 부여

-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센터 등이 있으며, 이런 센터는 독립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센터가 없는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등이 기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신고하기 어렵고 학교의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기간제인 보건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방안마련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성범죄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부모 및 보호자의 정보가 제한적이고 왜곡

되어 있을 경우 보호자로서 역할과 책임 수행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범죄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의 의무적 시행을 제안하고자 함

📍 제안3)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수립 및 활성화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

-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는 피해자의 문제를 우리 가족의 영역, 우리 사회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개개인의 대책이 아닌 공동체라는 집단적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 아울러 마을 전체가 강력한 연대감 속에 신상공개 제도나 신고의무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대책을 공유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캐치 프레이즈처럼 생활권을 함께 하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중심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한 성범죄 대처전략 수립

- 소극적 회피행동이 최선의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할수록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소극적 회피 행동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피행동을 적절히 못해서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본 연구 역시 양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성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범죄자 제재정책을 비롯한 제반의 성범죄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함

▶ 성인남성들의 성범죄예방 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

- 성폭력 예방 교육은 피해자가 ‘더 잘 피해 다니는 법’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해야 함
- 부모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성인, 그리고 남성들이 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및 제도개선안 제공

📍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참고자료

강지현 · 김지선(2013)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53호(2013), pp.9-36.

강황선(2004), “다차원지표체계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품질 측정”,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 pp.33-50.

권인숙 · 이화연(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제2호, pp.85-118.

김민아(2002), 성폭력의 두려움 정도가 여성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김지선 · 강지현 · 김정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훈 · 원혜옥 · 황태정 · 정혜욱(201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아동 · 청소년보호과.

Esther Madriz (1997), Nothing Bad Happens to Good Girls—Fear of Crime in Women's Liv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7. 1. pp.1-192.

Kate Hynes (2013), “The cost of fear: An analysi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community notification, and civil commitment Laws in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2 Penn.St.J.L.&Int'l Aff.351(2013), p379

Lisa Koverko (2010), Piercing The Veil of Secrecy : The Impact of The Child Protection Law on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88 U. Det. Mercy L. Rev. 51, Fall. 2010., 재인용.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부처: 기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특정범죄자관리과